
문서번호 행정2013-05-02

수 신 박준하 대통령기록관장 (031-750-2117 FAX 031-750-2118)

발 신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담 당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제 목 대통령 기록물 생산 및 이관 관련 의문점에 대한 질의

날 짜 2013. 5. 22. (첨부포함, 총 3 쪽)

대통령 기록물 생산 및 이관 관련 의문점에 대한 질의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권력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이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두 단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이관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5월 3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

■ 첨부. 질의서

참여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직인 생략]

■ 첨부. 질의서

질의서

1. 2008년 - 2013년까지 기록물 생산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기록물 생산현황에서 확인되는 비전자기록물 문서 731권(2008년 65권, 2009년 96권, 2010년 212권, 2011년 247권, 2012년 111권)이 대통령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는지, 이관되었다면 이관 일자는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2. 2013년 2월 22일 이관완료를 밝힌 안전행정부의 보도자료 중 (첨부1) 세무이관내역에서 밝힌 종이문서는 236,799건으로 앞서 생산현황의 기타종이기록물의 수량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비전자기록물 문서 731권의 이관이 누락되었다는 보도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서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세무이관내역에 생산현황에서 확인된 731권이 누락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술한 문서 731권의 자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려주십시오. (해당기록물 목록, 건별 대통령지정기록여부, 비밀여부, 권별(총) 건수 포함)
4. 기록물 생산현황에 따르면 2008년 - 2011년 사이에 비전자문서중 기타종이기록물이 생산된 곳은 민원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 뿐이었습니다. 다른 부서(경제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정부수석실 등)에서는 기타종이기록물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자기록물 중 문서도 일부 부서(2008년 실장직속부서, 외교안보수석, 홍보기획관실 / 2009년 총무기획관실, 메시지 기획관실 / 2010년, 2011년 실장직속부서, 총무기획관실 / 2012년은 구분하지 않고 공개)에서만 생산되었으며 다른 부서에서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기록물(기타종이기록물/문서)을 일부부서를 제외하고 생산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즐겼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를 염두에 둔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기록물생산 후 등록하지 않아 해당 기록물이 유실되었다는 의심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비 전자기록물 중 기타종이기록물/문서의 생산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5.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제17대 대통령실이 이관한 기록에서 확인이 어려운 지정기록물을 제외하면 비밀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6. 제17대 대통령실이 온나라 시스템과 신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한 문건이 매우

적거나 부서에 따라서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위민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다른 정부부처는 위민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타 기관과 업무협조를 한다면 온나라 시스템과 신전자문서시스템에서 기록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민시스템에서 타 기관(또는 다른 문서관리시스템)과 (공문수발신 등) 문서유통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국가기록원은 지난 3월30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이 매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매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그림1>과 같이 공개한바 있습니다.

②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현황

기관	2008		2009		2010		2011		2012~임기말	
	전자	비전자	전자	비전자	전자	비전자	전자	비전자	전자	비전자
경호처	71	646	131	28	91	33	0	0	0	0
민주평통	0	2	0	2	0	2	0	1	0	1
합계	71	648	131	30	91	35	0	1	0	1

<그림1>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자료 중 일부

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비밀기록의 생산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도 2011년에서 임기 말까지 비밀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실은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보호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어떠한 비밀기록도 이관하지 않아 폐기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밀기록의 생산현황 보고가 하지 않고 이관되지도 않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관리·이관 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